

의안번호	제551호
의결 연월일	2013년 10월 일 (제324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제안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3년 10월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의안 번호	551
----------	-----

제안연월일 : 2013년 10월 8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이유

- 지난 9월 30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그러나 미래부는 기능지구 활성화에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모든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종합 대책에 명시함은 물론 산업단지 면적을 구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붙임 : 건의문

보낼곳 : 청와대, 국회의장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
통신위원장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강창희 국회의장님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
 통신위원장님, 그리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월 30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지역별 강점산업에 기반한 특화 및 차별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거점·기능지구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기능지구 지역전문가, 과학벨트 관련 전문가, 지역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부가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충북도민들은 다시 한번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미래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안의 '기능지구 비전 및 목표' 부분에는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 근거를 마련해 과학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또한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과학벨트 특별법에 관련 근거 신설 추진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미래부가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미래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발표될 과학벨트 육성 종합대책에 지금처럼 '조성근거 마련'이란 애매한 표현을 명시하면 기속력이 저하됨은 물론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이 100% 성사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9월 2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과학벨트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충북도 등이 요구한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했음에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는 국토부 소관이라서 부처 협의를 마치지도 않은 사항을 발표할 순 없지 않냐”라며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책임회피용에 불과한 것으로 기능지구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6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고, 기능지구로 지정된 충북 청원군·충남 천안시·세종시 등 충청인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거점지구의 연구 결과물을 응용화·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기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2013년 10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